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화>

‘세림이법’ 취지 공감하지만 현실은? 지역아동센터 동승자 못 구해 ‘한숨’

확대 적용 50일...광주 잇단 호소 인건비 부담에 운행 포기하기도 일부 개인 차량으로 편법 활용 노인일자리 지원도 현실성 떨어져 예산·인력 지원으로 취지 살려야

통학차량에 동승자를 의무화 한 ‘세림이법’이 지역아동센터에 확대 적용된지 50여일이 됐지만 광주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동승자를 구할 여건이 못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센터의 열악한 재정 및 인력 구조로 인해 법을 지키기 위해 운행하던 차량을 중단하는 곳까지 등장하고 있어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시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306곳이고, 이 중 104곳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 통학 차량 내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버스에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며 이를 어길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호,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통학 차량 동승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29인 이하 시설이다.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는 2명이며, 한 명이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이 동승자로 나가면 아이들이 남긴 채 센터를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를 추가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아예 통학 차량 운영을 중단한 지역아동센터까지 나오고 있다.

센터장 1명과 복지사 1명이 근무하는 광주시 남구의 A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센터장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면 복지사 1명이 센터에 남아 아이들을 돌봤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세림이법이 적용되면서 센터장과 복지사가 모두 차량에 탑승할 경우 센터를 비워야 해 차량 운영을 중단했다.

A센터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광주시 북구 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12일 오후3시에 귀가를 위해 통학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를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세림이법’이 적용된지 50일이 다 되는데 지자체는 노인일자리를 공급해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검토중인 사항일 뿐 나아진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노인일자리 활용해 지역아동센터의 동승자 인력을 확보해 주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현장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지원자는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당장 1월에는 동승자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동승자를 노인일자리로 해결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빠른 움직임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동승자는 수백 번 앉았다 일어나야 하고 아이들을 태울 때 급작스런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큰 사고 위험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야간보호사업’ 확대로 저녁 8시까지 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 어르신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에 사회복지요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연말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이 몰리면서 지자체는 충분한 사회복지요원을 담당 충당하기 어려워 난감해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 통학 차량 대신 개인 차량으로 아이들을 태우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의 B지역아동센터는 최근 학부모들의 동의 하에 통학 차량 대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B센터 관계자는 “사정은 다급한데, 해결방법이 없으니 자차로라도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최강남 광주지역아동센터지원단장은 “‘동승자 의무’는 분명히 옳은 정책이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아 운영비를 늘린다고 해도 동승자 인건비로 쓰기 어렵다”면서 “종사자 1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력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 광주시 담당자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난해에 비해 8.5%(11만원) 인상하고 이외에도 외부 인력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무등산 원호사 지구 영업보상 품수 민원...일부 건물주 수사

경찰이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무등산 원호사 지구의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 품수를 썼다는 민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광주북부경찰은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원호사 지구 일부 건물주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의뢰한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

다. 지난해 8월 원호사지구 일부 상인들은 “공단지원과 투기세력이 유착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상이 이뤄졌다”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무소는 자체 조사로는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검토한 뒤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 유기 정황 등 범죄혐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지검, 5·18 사법 피해자 명예회복 앞장

53명 ‘죄 안됨’ 처분하고 직권 재심 청구로 141명 무죄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다.

광주지방법검찰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2년 사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3명에 대해 불기소(죄가 안됨)처분으로 변경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4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41명의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1980년 5·18을 전후로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9명을 지난 2021년 명예회복시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44명에 대해서도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

이들은 당시 고교생, 교사, 회사원 등 10~20대 광주시민으로 옛 전남도청 앞 시위에 참여했거나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포고령·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힌 뒤 구속돼 고초를 겪었다.

1980~1981년 당시 군검찰은 이들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전두환 일당의) 헌정질서파괴 범행에 반대하던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광주지검은 최근 ‘죄가 안됨’으로 당초 처분을 변경하고 있다.

5·18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유죄 확정판결 받은 이들과 달리,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과거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재심 등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광주지검이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31사단 군검찰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명예회복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53명 중 32명에게 불법 체포·구금에 대한 보상금 7억 6000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

광주지검은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18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147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확정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141명이 현재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 받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왜곡 지만원,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5·18에 참여한 시민들을 헐뜯은 보수는 각 지만원(82)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2심에서 고령인등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피했지만,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지씨에 대한 형이 집행될 전망이다.

지씨의 글을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퍼뜨려 같이 기소된 손모(63)씨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책, 유튜브 등을 통해 5·18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 특수부대원 일명 ‘광수’로 지목하는 등 수차례 비방을

일삼았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비방하거나 전주교 광주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들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폄하했다. 재판을 방청하려는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씨는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인터넷 매체와 화보집을 통해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린 혐의로 각각 8200만원과 9500만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5·18이 북한군 투입 또는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왜곡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해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김기선 지스트 총장 해임 대신 사임 결정

법정 공방중이던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의 해임문제가 강제조정으로 끝이 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해임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법원이 ‘김 총장은 2월 24일 자로 사임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안을 냈는데, 김 총장과 지스트 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7일 최종, 확정됐다.

양측은 김 총장의 당초 임기가 3월 5일까지인 점과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스트 노조는 김 총장이 센터장을 겸직하

며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쟁겼고 전 직원 중간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스트 측은 지난 2021년 3월 김 총장이 부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고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회사를 수용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사의 수용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김 총장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김 총장은 항소심과 함께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김 총장은 2021년 10월부터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원주택 (1채) → 7,000만

(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

- ① 세컨하우스
- ② 소형 주택
-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 ④ 주말 하우스 최고
-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

010-6670-9800

상가매매(상무지구)

(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

▶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

(6층, 7층) = 140평 시세 → 10억

➡ 급매 7억

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5억

010-2614-9801